



[해설] 프랑크푸르트 선인 25주년 글로벌 일류 넘어 '초격차' 삼성의 혁신은 계속된다 03



Economy

코스피	2453.76 (0.00)	코스닥	877.16 (0.00)
금리 (미국 3년)	2.20 (0.00)	환율 (원/달러)	2.83 (0.00) (6일)

P2P대출사기, 피해자 2000명... 금융메기의 배신

(P2P금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63회 현충일' 文 대통령 추념사

“남북관계 개선엔 DMZ 유해발굴 추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내년 4월 복원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중국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중징시에 설치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현충원에서 정부의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현충원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와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순직 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어 이날 행사는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

겨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전쟁터에 나간 것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의 국민들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이었고, 대전현충원은 바로 그분들을 모신 곳”이라며 추념식을 대전현충원에서 가진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독도의용수비대, 연평도 포격전사자, 천안함 호국영령, 소방공무원, 경찰관, 순직공무원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흔들리는 P2P금융

#. 1년 6개월째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A씨(40). 그는 투자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상환 받았지만 최근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나머지 3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A씨는 P2P 금융 투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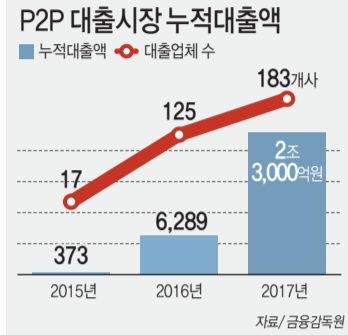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며 중(中)금리 시장의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P2P 금융 대출시장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P2P 금융업체 부도와 대표 잠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금융으로, 투자부터 대출까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대출받는 사람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안 금융’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373억원(17개사)에서 2016년 말 6289억원(125개사), 2017년 말 2조3000억원(183개사)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P2P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 P2P 대출시장 ‘빨간불’

6일 P2P 금융권에 따르면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



‘2시펀딩’·‘헤라펀딩’ 이어 ‘오리펀드’ 대표 상환금 먹튀 ‘더하이원펀딩’은 연락 두절

투자자 모임 법적 절차 준비 靑 게시판에 관련법 요청도

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예정인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오리펀드 130억원, 더하이원펀드 110억원대다. 피해자는 최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피해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업체는 출금과 투자에 관련한 모든 금액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오리펀드 문성현 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일 통화에서 오리펀드 문 이사는 “아직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까지 더하이원펀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네이버 P2P투자자카페 ‘피자모’와 ‘크사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피해 회복이 불확실해진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표가 잠적한 P2P금융 업체에 긴급수배권 발동’과 ‘P2P 관련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5일 P2P와 관련한 금융사기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포함하면 참여인원은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사기행각이 의심되는 대목은 ‘담보물이라고 게시한 사진이 무료 사진공유사이트에서 공유되던 사진이라는 점’과 ‘투자를 유치할 때 담보라고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위조됐다’는 점이다.

◆ P2P 규제 강화될 듯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앞서 ‘P2P금융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마련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P2P 금융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본궤도 오르는 북미정상회담 12일 10시 카펠라호텔서 담판

(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지리상 경호·보안 최적화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구체적 장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비핵화 담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미국 백악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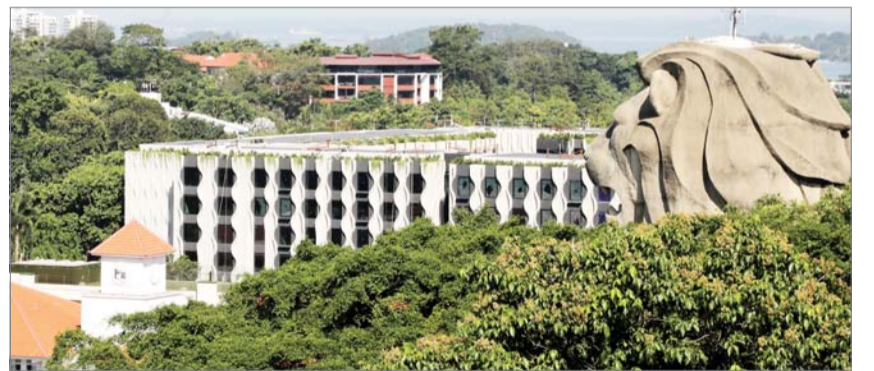
“행사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첫 회담이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판문점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북미 양측은 현충일인 6일에도 막바지 의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최종 낙점된 카펠라 호텔은 북미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그동안 머물러 온



오는 12일 북미정상이 만나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전경. /연합뉴스

곳이기도 하다.

특히 카펠라 호텔이 위치해 있는 넓이 4.71km²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 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당초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관측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아닌 카펠라 호텔로 결정된 것도 이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경호와 보안에 최적화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에 이어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된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